

노대통령 “당 진로 지도부 결정만으로 안돼”

신당파에 ‘일전 불사’ 선전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해외 순방길에 나서면서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진로는 지도부나 의원들이 결정할 수 없으며 차별화와 탈당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밝힌 파문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과 우리당 지도부간 갈등이 과국의 국면으로 치닫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사실상 당내 통합신당파에 대해 선전포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당 내부의 통합신당파는 노 대통령이 입장 표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결국 결별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측근을 통해 “합 말이 없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노 대통령의 편지는 사실상 사수론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제 분당도 각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는 6일부터 설문

“신당은 구 민주당으로 회귀” 비난 신당파 “당내문제 관여말라” 반발

특히,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처한 어려움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대통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심상함을 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통합신당파에 선전포고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당 내부의 통합신당파는 노 대통령이 입장 표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결국 결별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측근을 통해 “합 말이 없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노 대통령의 편지는 사실상 사수론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제 분당도 각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는 6일부터 설문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에 참석한 김근태 의장 등 여당 지도부의 표정이 깊어가는 당청 갈등 때문인지 무겁기만 하다. /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당의 진로 문제는 당 지도부나 대통령 후보 희망자, 의원 여러분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당헌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통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게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내 통합신당 추진 논의와 관련, “통합신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세력이 참여하는지 들여보지 못했다”라며 “다만 민주당이나 특정 인물이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될 뿐이며, 결국 구(舊) 민주당으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합신당파의 양형일 의원은 “입기 말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원과 국민에게 더욱 설득력 있을 것”이라며 “국익이 걸려있는 해외순방에 나서면서까지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발맞춰진 노 진영에 속한 일부 의원들은 일제히 개인성명을 내거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 지도부가 추진중인 설문조사의 부당성을 집중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4·19는 숭고한 혁명”

“노대통령 탈당은 옳은 일 아니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4일 “4.19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인, 숭고한 희생이 따른 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사진 친,인척의 확고장단 임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여당 사학법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재개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진 문제이고,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탈당시 한나라당의 중립내각 참여 가능성과 관련해선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탈당은 옳

“야3당-NGO 범국민연합해야”

김진홍 뉴라이트 상임의장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홍 상임의장은 4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연대를 하고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범국민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성향이 비슷하면 (차기 대선에서) 통합은 안돼도 연대를 해야 한다”면서 “또 뉴라이트와 정통



보수 등 NGO들도 단합해 (야3당 연대와) 함께 범 국민 연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어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빅3’의 경선 불복 가능성에 대해 “이러한 ‘이인제 효과’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역사교과서와 관련, 김 의장은 “제작위원 한두명이 뉴라이트 정신에서 벗어난 의견을 담았다”며 “토론회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19는 혁명, 5.16은 군사쿠데타이고 5.18 민중항쟁도 중요하다”고 규정된 뒤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경우도 남북 공조와 같은 좋은 취지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뉴라이트 내부 갈등설과 관련, “차제에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뉴라이트네트워크를 통합해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대해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근태-정동영 보조 맞추나

‘위기의식’속 신당 창당 일단 협력
대권 주도권 쟁탈전 불가피할 듯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정계계편 논의가 치열해 지면서 열린우리당내에서 독자적 계파를 갖고 있으면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의 ‘관계’는 현 여권 혼돈상황의 상수다.

과거 수차례의 전당대회와 당내 갈등 와중에서 ‘대리전’ 또는 ‘전면전’을 벌이며 경쟁해온 두 사람이다. 그러

나 이번 만큼은 ‘통합신당’이라는 기치하에 하나인 듯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신당’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정 전 의장의 한 측근은 4일 김 의장이 최근 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 “정 전 의장은 김 의장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 전 의장은 김 의장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과 가까운 한 측근의원은 “통합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두 사람이 앞으로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데는 ‘현 시점에서의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

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한 초선의원은 “후보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상황에서 당, 나아가 여권 전체를 살려 내지 못하면 자신들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면서 “통합신당 창당에 양측은 일심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반자적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권’이란 목표를 놓고 오랫동안 경쟁을 벌여왔던 두 사람간에는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의 앙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당 창당과정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빚어질 경우 급격히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건교·박명재 행자
6·11일 인사청문회 실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11일 각각 실시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섭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한 뒤 7일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키로 했고, 행정자치부도 11일 인사청문회 개최, 12일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이 내정자는 참여정부 들어 국제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내 건교장관 인사청문회까지 합치면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래 인사청문회를 세 번 거치는 첫 인물이 된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건교·행자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블러막기식 인사, 보은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 이주은씨 등 6명 고발
하지원씨는 고발대상서 제외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감에 불출석한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이사 등 6명의 증인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영화배우 하지원(본명 전제립)씨와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 고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위가 고발기로 한 대상은 이주은 대표이사(현대차그룹 내부거래관련)를 비롯해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사장(주식불공정거래 관련), 삼성테크스코 이승한 대표 및 롯데마트 이철우 사장(불공정 하도급 관련), 롯데쇼핑 이인원 대표이사 등이다.

그러나 조영주 KTF 사장(휴대전화 할부보증료 관련), 김범수 NHN 사장(포털 불공정거래 관련), 이재형 현대코리아 사장(사행성 게임 관련) 등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매일밤 8시부터 **췌췌췌** 애들은가라!!

설운도

12월 7, 8일

부랑전국 100%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우성온수매트!

100% A등급 제품 및 100% A등급 서비스

1600-7234